

현장과 시각

민주당, 민주계 양보에 답하라



홍행기

정정부 차장

통합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구 민주계와 열린우리당계 간 세력싸움이 열린우리당계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구 민주계인 광주시당과 최경주 공동위원장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마지막까지 전남도당위원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국창근 현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이 '통합민주당 내부 계파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라는 명분 아래 지난달 28일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상처는 봉합했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집안 행사에서 구 민주계와 열린우리당계 간의 분열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1일 치러지는 광주시·전남도당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통합민주당 양대 세력인 구 민주계와 열린우리당계는 수차례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왔다. 특히 국창근 전남도당 공동위원장과 최경주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소수계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대의원 중 40% 배정'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대의원대회 불참까지 선언하는 등 열린우리계 주도의 대의원대회에 강력 반발해 왔다.

구 민주계의 한 인사는 "4·9총선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계 의원들과는 최근까지도 만남이나 대화 없었다"며 "민주당 기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면서도 막상 권력을 잡게 되자 구 민주계를 배척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그는 "이제 광주시·전남도당위원장까지 열린우리당계 인사들이 맡게 됐으니 앞으로 구 민주계가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선결과전에서 구 민주계 인사들이 대거 열린우리계측으로 출마현상을 보인 것도 '순수' 구 민주계 인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전남도당의 한 민주계 인사는 "이번에 대의원 명부작성 작업을 해 봤더니 민주계 세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과거의 민주계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권력을 쥔' 열린우리당계로 옮겨간 것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이제 통합민주당을 '화학적으로 통합시킬' 책무는 열린우리당계로 건너갔다. 시·도당위원장 선출과정에서 구 민주계 인사들은 열린우리당계에 일단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광주시당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동철 의원은 "최근 구 민주계 인사들을 만나보니 오해와 불신이 산재해 있어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당을 운영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겠다"고도 말했다.

'현실정치의 권력을 쥔' 열린우리당계가 구 민주계와의 소통을 통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정 결산

조례 제정 활발 집행부 견제 미흡

제5대 광주시의회와 제8대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30일로 전반기 임기 2년을 마감하고 1일부터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시의회와 도의회의 의원 유급제가 적용된 첫 의회로, 출범 초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본다.

광주시의회

시민 생활 안전 처리 호평

현직의원 구속 자질 서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2년간 의원 발의 37건을 포함, 모두 3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 결의' 등 각종 건의안과 동의안 21건을 처리했다. 특히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조례',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조례' 등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데다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조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의정 활동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 전국 기초·광역의회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지역발전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의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우수상(손재홍 의원) 수상 등으로 돌아왔다.

반면 출범 초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추태를 보이는가 하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유급 인턴보좌관 제 도입을 추진해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또 집행부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의회의 존립 기반을 위협받는 수도를 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현직 의원이 복직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고 일부 의원은 성폭력 연루 의혹으로 자질 서비가 벌어지면서 시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

조례 등 안건 231건 처리

계파 싸움·결합기 감사

출범 직후부터 새로운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전체 의원 51명 가운데 70% 정도

가 '물갈이'됐고 초선의원도 33명으로 절반이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기 의정활동은 애초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기 2년 동안 조례안 148건, 예산결산안 23건을 비롯 모두 23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개적이고 외부적인 활동은 과거 의회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F1(포틀러원 자동차대회) 운영법인(KAVO)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차입 상환 보증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들 수 있다. 도의회가 지난 5월 의안상정 이를 만에 원안 통과시킨 이 승인안은 '전남도가 책임져야 할 1천500여 명의 자금을 보증하는' 안건이었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말병을 빚었던 구민주당계와 구열린우리당계 간 기 싸움,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둘러싼 파행 운영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정당행사를 이유로 도정질문을 축소하는가 하면, 수박 결합기식 행정사무감사와 전문성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점도 되풀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일본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이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총장 日 유엔활동 지원 요청

후쿠다 총리와 회담...오는 5일 고향 음성 방문

일본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반 총장은 유엔 활동에 대한 일본측의 지원을 당부했고, 후쿠다 총리는 아프리카 수단 남부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수단 파견단(UN-MIS) 사령부에 육상자위대 자위관 2~3명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총장은 이에 앞서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과 회담을 갖고 오는 7일 훗카이도 도야코에서 개막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지구온난화

대책, 식량 위기, 아프리카 개발 문제와 북핵 문제, 중동평화 문제, 유엔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반 총장은 또 이날 낮 일본 왕궁으로 아키히토 일왕 내외를 방문했다.

한편, 반 총장은 오는 5일 고향인 충북 음성군을 방문한다. 음성군 등에 따르면 정부 초청으로 3일 한국에 오는 반 총장은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5일 오전 10시 고향인 음성군 원남면 상당1리 윗행치 마을을 생가터에 도착, 곧바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 성묘한 뒤 광주 반씨 사당을 참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빨라야 내주 후반 재개

G8 정상회의 이후에 열릴 듯

북핵 6자회담 재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30일 "외장국인 중국이 아직까지 차기 회담 일정을 회담 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나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일정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G8 정상회의 이후에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원래는 이번 주에라도 열리고 추진했지만 한 두 주 미뤄진다고 해서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 다음 달 7~9일 일본 도야코에서 G8정상회의와 G8확대정상회의 등 정상급 외교 이변

트가 열려 같은 시기에 6자회담을 개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6자회담은 일러야 다음달 10일 개 개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6자회담을 언제든 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북한이 회담 재개가 늦어지는 변수는 아님을 시사했다.

6자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 주로 협의하고 6자 외무장관회담 일정과 3단계 핵폐기 일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北 "남측 옥수수 5만t 안받겠다"

정부는 지난 5월 제안한 대북 옥수수 5만t 지원에 대한 북측 입장을 최근 재차 확인했으나 북측 실무자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옥수수 지원 문제에 대한 북측 입장을 문의했으나 북측 실무자는 '안받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 당국은 (옥수수 지원 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

적십자사 총재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전화 통신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전통문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옥수수 5만t 지원을 수용하려 할 경우 별도의 남북 당국간 대화 또는 접촉 없이 직접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북측이 원하는 인수 장소와 시기·방법 등 실무적인 사항을 알려주면 옥수수 5만t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이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우중 차명주식

770억원대 확보

檢 추징 절차 착수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을 확보하고 이를 추징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이날 중순에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 가운데 수백억원의 돈이 베스 트리드라미티드사(구 대우개발)의 차명 지분 등의 형태로 은닉돼 있는 것을 찾아냈다. 검찰이 확보한 주식은 액면가로 모두 7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을 압류한 뒤 공매를 거쳐 현금화해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호남최대!! 인마의자·홈사우나 전문매장' (Hoseon's Largest!! Inma's Chair Home Sauna Specialty Store).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hair and text describing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Nursing Care Worker National Qualification Acquisition Education Student Recruitment). Includes a table of course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training center.